

중소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

- 독일 중소기업으로부터 시사점 도출 -

유 주 선*

차 례

I. 서 론

II. 독일의 경제성장과 그 특징

1. 지속적 경제성장
2.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3. 중소기업 중심의 조직
4. 가족기업 형태

III. 독일 중소기업과 그 발전요인

1. 중소기업의 지위와 의미
2. 금융지원 시스템
3. 직업교육 시스템
4. 중소기업 창업 지원정책
5. 입법적 지원

IV.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언

1. 대기업위주에서 중소기업으로 역할 확대
2. 직업교육의 효율화
3. R& D 효율성 강화
4. 가족회사의 지속적 발전
5. 자금 지원 측면

V. 결 론

*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접수일자 : 2014. 11. 30. / 심사일자 : 2014. 12. 10. / 게재확정일자 : 2014. 12. 10.

I. 서론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져 자칫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경기부양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동시에 정부 출범 때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경제민주화 관련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2013년 4월 30일 납품단가후려치기 등을 규제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및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과도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았던 “일감몰아주기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6월 임시국회에서 큰 진통 없이 처리된 경제 민주화법안으로는, 금산분리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있었고, 편의점주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도 의결되었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에 대해 현재 검찰만 가진 고발요청 권한을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통과되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순환출자의 규제에 대한 사항이다. 기존 순환출자를 포함하여 신규 순환출자까지 금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존 순환출자는 허용하되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순환출자의 규제는 무엇보다도 주식회사 자본의 실질적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본적 기초가 결여된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며, 소유와 지배의 괴리에 따른 의결권에 왜곡을 시정하여 지배구조의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다. 2013년 12월 3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일부개정이 있었다.¹⁾ 2014년 1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 간 신규순환출자금지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관련 분할회수 상향조정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관한 일부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중소기업법제의 입법정책과 개정 논의는 전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세계적인 중소기업의 모범적인 국가인 독일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그 논의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독일의 경제성장과 그 특징

1. 지속적 경제성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연합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는 다른 국가와 달리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G7 국가 중 독일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여 주었으며, 다른 국가들이 국가채무의 영향이 파급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성장세에 있어서도 큰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다.²⁾ 실업률 역시 유로지역이 2012년 11.4%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5.5%로 유로지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국가 중 독일의 중소기업이 유럽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³⁾ 금융위기와 남부 유럽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1) 자세한 유주선, “주식회사 순환출자에 관한 최근 입법논의”, 「경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4, 184쪽 이하.

2) 국제경제리뷰,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는 주요 배경”, 한국은행 제2013-10호, 2013. 4. 29. 1쪽. 실제로 유로지역이 2011년 +1.4%에서 2012년 -0.6%로 하락하였으나, 독일의 경우 2011년 +0.3%에서 2012년 +0.7%로 나타나고 있다.

3)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주평, 2011-09, 통권 제436호, 1쪽.

하고 유럽의 중심국가 독일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고, 경제회복의 중심에 중소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건대, 독일은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경쟁력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⁴⁾ 2009년 국제산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⁵⁾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독일은 2005년 기준 122개국 가운데 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 대비 일본이 -2.3%로 하락하였고, 미국 역시 -4.5% 하락한 반면 독일은 2.7%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2.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주요 선진국의 탈산업화와 관련하여 독일 제조업을 고찰한 연구보고서가 있다.⁶⁾ 동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제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독일, 일본, 이탈리아 및 영국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1%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에 이르게 되면, 독일의 제조업 비율은 다른 국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⁷⁾ 2008년 독일 제조업은 전체 고용의 19%로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높고, 아시아 대표적인 국가인 17%의 한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독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4%에 해당한다. 제조업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독일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다른 산업과 비교한 제조업의 비율이다.⁸⁾ 미국의 경우 제조업보다 GDP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일본의 경우 GDP

4) 중소기업 정책 영역에서 순환적 상호작용에 대하여는 공영일, “독일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I)”, 「방송통신정책」 제25권 제22호, 통권 567호, 2013, 5쪽 이하.

5)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를 말한다.

6) 김계환·온기운·장태석, “독일 제조업 경쟁력 요인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13, 29쪽 이하.

7)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생산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국가에 해당한다. 그 점에서 본다면, 독일과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8) 김계환·온기운·장태석, “독일 제조업 경쟁력 요인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13, 33쪽.

비율보다 제조업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주지만, 독일 역시 GDP 비율보다 제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독일의 수출종목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지는 품목을 살펴본다. 비교우위 제품으로는 자동차와 기계, 장비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 기계와 하드웨어 등도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원유와 천연가스 등은 비교열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농산물도 무역수지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 중소기업 중심의 조직

독일의 헤르만 시먼(Hermann Simon)교수는 1990년대 초반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이지만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으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 지칭하였다. ‘히든 챔피언’은 독일에서 세계 니치마켓에서 그 수가 약 500개에 이르며, 1등 중소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다시 독일 기업을 추적한 결과 세계 시장 점유율 1~3위에 있는 ‘히든 챔피언’은 1,500개로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1,350개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요 분야는 기계장비, 전기전자, 산업생산물과 서비스, 소비자 생산물, 자동차와 그 부속품 등 5개 분야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가족기업 형태

(1) 점유율

독일은 16개로 이루어져 있는 연방국가에 해당한다. 국민의 거주가 분산되어 있고, 교육이나 경제 등이 하나의 도시에 집중되지 않고 각각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방 및 소도시에 분포해 있으면서 가족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독일 중소기업의 특징이다. 실제로 독일 중소기업의 97.3%가 가족기업에 해당하며,

2006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41.1%, 총 정규직 고용의 61.2%를 담당하고 있다. 매출액 10억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 중에서는 매출액의 97.5%, 정규직 고용의 98.2%를 가족기업이 차지하고 있다.⁹⁾ 업체의 수에 있어서나 고용하고 있는 종업수의 수에 있어서 독일의 중소기업은 경제발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에서 다수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

(2) 강점

가족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¹⁰⁾ ‘직원, 공급자 및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높은 신뢰를 형성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위기 극복이 강하다는 점’과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단기 실적보다 장기적 성과에 집중하며 경영자가 자기 책임 하에 과감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가 정신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기업의 장기유지성

2012년 396개 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들은 70년 혹은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들이 다수 유지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장수기업으로 수세대를 이어 경영되고 있는 면이 특징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보다 더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이들 기업은 안정적 경영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에서 30개의 가족기업으로 구성된 DAX plus Family 30이 대기업으로 구성된 DAX를 지속적으로 상회함으로써 가족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대기업에 비하여 양호함을 입증하고 있다.¹¹⁾

독일의 가족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의 세제혜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래전부터 독일은 사업

9)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주평, 11-09 통권 제436호, 2011년 3월 1일, 9쪽.

10)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주평, 11-09 통권 제436호, 2011년 3월 1일, 10쪽.

11) 박진호,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는 주요 배경”,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제2013-10호, 2013. 4. 29, 8쪽.

승계 시 사업자산 가운데 25만 6천 유로를 특별공제하고 남은 자산의 평가에서 60%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고 있다.¹²⁾ 이는 가업승계를 고려한 하나의 정책적인 결단이라 하겠다. 2008년 다시 한 번 세법을 개정하여, 승계기업의 총 지분 중 상속인이 4분의 1이상을 10년간 유지하면 상속세를 면제하고, 7년만 유지하더라도 상속재산 중 15%만 과세하도록 하였다(독일 상속세법 제13a조, 제13b조).

III. 독일 중소기업과 그 발전요인

1. 중소기업의 지위

중소기업을 정의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¹³⁾ 다만, 다음과 같은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제시될 수 있다. 독일 중소기업연구소(Institut für Mittelstandsforschung: IFM)에 따르면, ‘직원 500명 미만이며 연매출 50만 유로’를 양적 기준으로 하고, ‘기업의 소유와 경영책임자의 일치’를 질적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수 9명과 매출액 100만유로 이하면 소기업(Klein)에 해당하고, 10명 내지 499명에 100만유로 내지 5000만 유로에 해당하면 중기업(Mittel)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독일 경제의 중추, 사회시장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이다. 독일 중소기업은 2009년 367만 여개에서 2012년 370만개로 증가하였고, 점유율에 있어서는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368만개로 99.6%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기업체 고용자 2,568만 명 중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수는 1,524만 명으로 60%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중기업은 1,184만 명으로 46.1%, 소기업은 358만 명으로 13.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12) 전삼현, “유한회사, 상속승계 가능해야”, 2012 정책제안, 자유경제원, 1012년 1월 16일.

13) 독일 유한회사법에 따르면, 회사형태는 사원 모두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회사(GmbH)의 모습을 띠고 있다.

2. 금융지원 시스템

독일의 중소기업은 부흥금융공사(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 부담조정은행(Deutsche Ausgleichsbank: DtA)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중소기업이 이들 금융기관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아니다.¹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창구는 하우스뱅크(Hausbank)로 불리는 일반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독일의 하우스뱅크(Hausbank)는 우리의 지역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지역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¹⁵⁾ 독일은 은행을 대형화하는 대신 철저하게 지역 밀착형으로 육성해 기업 지원에 나서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영은행인 저축은행은 지역 가게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매금융에 주력한다. 은행 담당자가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하는 이른바 하우스뱅크(Hausbank) 체제이다.¹⁶⁾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저축은행 쉬파르카세(Sparkasse)는 정관에 ‘지역의 자금수요를 먼저 충족하고, 주요 거래대상으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계층과 중소기업’이라고 못 박고 있다. 결국 독일은 민간 금융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책금융기관인 독일부흥금융공사(KfW)가 직접 중소기업 대출에 참여하지 않고 주거래은행에 해당하는 전대은행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간접대출(On-lending) 방식을 채택하면서 KfW와 전대은행 간의 위험분담비율에 따라 서로 신용위험을 공유하고 있다.¹⁷⁾

14) 장선영,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9, 21쪽.

15) 김광희, “독일 중소기업금융지원 및 on-lending 방식의 우리나라 중소기업금융지원에의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08, 3면 이하.

16) 독일 정책자금의 지원체계도식에 대하여는 고규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9쪽.

17) 한국신용평가 보도자료 2013년 2월 6일자.

3. 직업교육 시스템

(1) 교육시스템

독일은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¹⁸⁾ 독일의 경우 교육과정에 따라 한 번 정해지면, 학제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¹⁹⁾ 다만, 예외적으로 학생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학교 간 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3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최근 그 기간을 1년 단축하여 12년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2) 직업교육

독일의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는 필요한 인력공급에 있다고 하겠다. 다른 국가와 달리, 독일은 독특한 ‘도제교육’과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²⁰⁾ 전체 학생의 27%가 직업학교에 다니며, 직업 교육생 가운데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다. 기업과 학교가 상호교류를 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학교와 기업이 상호협조 하에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기업은 현장실습을 주로 하고, 직업학교는 전문분야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기업과 직업학교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독일 고교단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은 이원화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진로선택을 개선 하며 숙련된 기술 인력의 확보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평생교육을 통한 근무능력의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²¹⁾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도제훈련은 연방정부, 주정부, 상공회의

18) 자세한 강환국·권석진·이연주,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3-020, 2013, 2쪽 이하.

19) 독일 학제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기에 직업교육과 비직업교육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반론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년 3월 27일자 2쪽.

21) 강환국·권석진·이연주,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2-020, 2013. 3. 19. 4쪽.

소, 수공업협회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인력양성시스템은 직업과 일자리, 그리고 교육이 연계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4. 중소기업 창업 지원정책

(1) 의의

독일은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중이 높다. 또한 산·학·연 등의 혁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독일에서 중소기업이 발전하게 된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독일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비중은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투자비중이 5.0%에 이르고 있다.²²⁾ 2007년 기준 대기업의 R&D 비율이 3.1%에 이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중소기업은 경우 매출액 가운데 연구투자비가 3.6%에 달하여 대기업보다 높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목적

독일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기업의 창업여건 개선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노력하고 있는바, 독일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는 첫째, 기업 활동에 유리한 경제환경의 틀을 조성하고자 한다. 둘째,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대기업과 비교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리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목적과 지역정책, 환경정책, 기술정책의 목적 등에 추진하고자 한다. 넷째, 창업지원 및 창업회사의 자립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다섯째, 정보나 자문 또는 노하우 이전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면을 띠고 있다.²³⁾

22)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주평, 11-09 통권 제436호, 2011년 3월 1일, 4면에 의하면, 세계 1,250개의 R&D 집중기업의 3.6%보다 1.4% 높다는 지적이 있다.

23) 송준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2009, 19쪽.

(3) 첨단 중소기업 창업마스터플랜

독일의 경우 기술 지향적 창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연구 기반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하고자 ‘첨단 중소기업 창업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본 사업은 연방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본 플랜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된다.²⁴⁾

1) 첨단기술 창업기금

‘첨단기술 창업기금’의 목적은 기술기반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캐피탈 자금을 제공함에 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예비창업(seed)과 창업단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민간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첨단기술 창업기금’이 대신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주로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회사로부터 분사한 경우가 그 대상이 된다. 지원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예비창업 단계의 기술기반, 첨단기술 지향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 프로젝트 관리자와 기술별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게 된다. 자금은 벤처캐피탈을 통하여 공급되며, 지원범위는 예비창업과 창업단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해당된다.

2) 신기술에 대한 주제별 R&D 프로그램

첨단 중소기업 창업마스터플랜 프로그램은 중장기 혁신 도전 및 혁신 잠재력의 전략적 비전 개발에 목적을 두면서, ① 기업의 연구 및 기술혁신 관련 지출비중의 확대. ② 전략적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흡수 촉진. ③ 혁신활동과 지식교류의 관점에서 기업과 다른 주체 사이의 협력발전 지원. ④ 기업의 민간부문 혁신 자금조달력 증대. 5) 기업 혁신활동 결과 상업화 및 마케팅 증대라고 하는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글로벌

24) 한국경제신문 2011년 11월 21일자를 참조; 차두원·손병호,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 혁신 지원정책 동향 조사·분석”, 2006. 12, 55쪽 이하.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54년 독일 내 업종별 산업연구협회로 구성되어 설립된 연방산업연구회(Allianz Industrie Forschung: AiF)는 2007년에 시작된 기술혁신지원정책(KMU-Innovation)사업으로 2010년 6월 기준 바이오 기술, 에너지 기술 및 나노기술 등 450개 프로젝트에 3억 유로를 지원한 바 있고, 중소기업의 혁신프로그램인 ZIM(Zentral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²⁵⁾ 특히 ZIM은 독일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R&D 프로젝트의 기술적·경제적 위험을 줄여주며, 시장에 R&D 결과를 빠르게 침투시키고자 노력한다.²⁶⁾

동 프로그램이 역점을 두는 분야는 생산기술과 나노기술, 핵심기술을 위한 신소재, 마이크로시스템 기술, 레이저 및 광학 기술, 실리콘 기술에 기반 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이다.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모든 유형의 기업, 대학, 기술대학, 공공연구센터, 민간연구조직 및 개인 등이다. 선정기준은 클러스터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협력이나 네트워킹이 선택적이다. R&D 프로젝트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현재의 기술수준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공헌하는 내용이면 가능하다.

3) 기술 벤처캐피탈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1990년에 시작되었으며 2009년까지 계속되었다. 각 단계별로 지원 내용이 서로 다르다. ① 예비창업 단계(Seed Stage)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인 "e초기단계(Early Stage)"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 ② 창업 단계(Start-up Stage)에서는 ERP 창업기금이 매우 초기 단계의 투자에서 민간 선도 투자가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공동으로 투자한다. ③ 후기 단계(Later Stage)에서는 ERP 지분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자에 대해 최고 100만 유로까지 재금융 용자(투자의 75% 범위 내)가 가능하다.

지원은 보조융자(subsidized loan) (이자 감면 포함), 벤처자금 (보조융자

25)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주평, 11-09 통권 제436호, 2011년 3월 1일, 3쪽.

26) 유주선, "독일의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정책과 법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주최한 '중소기업혁신촉진법 개정방안 연구' 제3차 워크샵 자료집, 2014년 7월 31일, 22쪽.

포함), 보증 및 벤처투자의 재금융 등의 방식이 있다. 벤처캐피탈 기업이 재금융과 보증 대책의 주요 목표 그룹이 선정된다. 지원은 ① 예비창업 자금은 젊은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해 제공하고, ② 초기단계 자금은 창업 5년 미만의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며, ③ 후기단계 프로그램(재금융과 보증)은 종업원 500인 및 매출액 5,000만 유로 미만 또는 매출액 5억 유로 미만의 기업에게 제공하게 된다. 본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협력과 네트워크 구성이 의무적이다. 또한 기업가/창업 촉진(인큐베이터 포함)이 있어야 하며, 응용산업연구 및 개발과 프로토타입 창출이 있어야 한다.

4) 연방혁신센터

독일연방혁신센터(ADT)는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센터는 창업보육센터, 기술이전사무소, 컨설턴트, 금융기관의 연합체를 구성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4) EURO 6 Billion Programme

1) 개요

독일 정부가 대연정(Große Koalition)²⁷⁾ 협약에서 합의했던 프로그램이다. 2005년 구체적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2006년 4월부터 'EURO 6 Billion Programme'을 시행하였다.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존 예산안에 책정된 연구개발비 이외 2009년까지 6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다.

2) 내용

주된 내용은 '첨단 기술을 통한 미래시장의 선도'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이다. 본 사업은 우선적으로 첨단 기술 및 기반기술을 집중적 육

27) 2005년 11월 독일 하원(Bundestag)은 앙겔라 메르켈(Angela D. Merkel) 기민당(CDU) 당수를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했다. 메르켈 총리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7년 동안 이끌어온 사민-녹색당 연정을 넘겨받고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사민당(SPD)의 대연정(Große Koalition)을 공식 출범시켰다. 독일의 대연정은 1966년 첫 번째 이후 39년 만으로, 하원 의석 614석 중 448석을 차지하여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성하고,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미디어, 생명공학, 나노기술, 우주항공기술, 보건의료기술, 에너지, 환경 및 삶의 질, 교통 분야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혁신을 위한 재원조달여건을 개선하며 연구결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하이테크 창업기금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생명공학분야의 창업지원책 GO-Bio와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지원프로그램인 PRO INNO(Programm Innovationskompetenz mittelständischer Unternehmen) II의 일환으로 마련한 「혁신활동개시 기업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²⁸⁾ 1차적으로는 추가재원을 기존의 효과적인 지원책에 투입해 정부 지원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보다 공고히 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 프로젝트지원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 둘째, 대학교와 공공기관 등 신지식생산기반의 전반적 시스템 강화하고자 한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독일 과학시스템의 강화기조를 한층 가속하고, 과학시스템의 강화에 필수적인 가용재원의 투입기준은 연구우수성과 품질이며, 특히 「지금보다는 나은」 것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셋째, 막스 프랑크 연구협회(MPG),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라이프니츠 등 공공연구협회에 2010년까지 매년 최소 3%의 예산 증액을 보장함으로써 예산 및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사업계획 및 실행의 안정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5) 연구프리미엄제도

현장성 있는 상용화 R&D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소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국가

28) 1997년 7월에 발족된 중소기업 기술혁신능력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구주체들 사이에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규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PRO INNO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되었으며, PRO INNO II는 2004년 8월 1일에 개시되었다. PRO INNO II는 특히 국내 협력 프로젝트보다 국내 기업 및 연구소가 해외기업 또는 연구소와 협력하는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자세한 유주선, “독일의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정책과 법제”,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방안 연구 제3차 워크숍 자료집, 2014년 7월 31일, 24쪽.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는 정책이 ‘연구프리미엄제도(Forschungsprämie)’이다. 연구와 시장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효과적인 제도로 대학과 연구소가 보다 긴밀하게 중소기업과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독일 GDP 대비 R&D 투자를 3%로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본 제도는 독일산업연맹과 달리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5. 입법적 지원

(1) 유한회사 경쟁력 제고 필요성

독일에서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 Haftung: GmbH)는 자본회사에 해당한다. 동일한 자본회사인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적은 수의 사원과 폐쇄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중소기업으로서 주로 작은 규모로 운영하게 된다.²⁹⁾ 2002년 들어 유한회사의 설립신청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띠었다. 반면 영국식 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는 독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³⁰⁾ 2007년 통계에 따르면, 독일에서 영국식 유한책임회사는 30,000개에서 40,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유한회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독일이 인정하고 있던 소재지이론을 배제하고 설립지이론을 수용한 것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³¹⁾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영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가 독일의 본점 소재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하게 되었고, 독일 유한회사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국의 유한책임회사가 독일에서 증가하게 된 것이다.³²⁾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2007년 독일 법무부는 유한회사의 현대적인 면으로 수정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시도하였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한회사 법 형태를 보다 더 매력적이면서도 유럽의 여타 국가들보다 보다 더 독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설립자본

29) 이범찬·최준선, 상법(상) 제5판, 삼영사, 2008, 972쪽.

30) Kinder, Grundzüge des neuen Kapitalgesellschaftsrecht, NJW 2008, S. 3249.

31) EuGH, Slg. 1999, I-1549 = NJW 1999, 2027 - Centros; EuGH, Slg. 2002, I - 9919 = NJW 2002, 3614 - Überseering.

32) 자세히는 유주선, “2008년 독일 유한회사법의 개정과 시사점”,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3권, 2009, 114쪽 이하.

금과 설립비용이라고 설립자들의 금전적 부담감과 설립 시 발생하는 행정절차의 불편함의 제거에 있었다.

(2) 주요 내용

1) 1-Euro-GmbH

독일은 용이하면서도 빠른 기간 내에 중소기업이 설립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본금이라 함은 유한회사의 설립을 하는 경우에 납입되는 출자금을 의미한다. 유한회사 설립을 보다 더 빠르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을 25,000유로에서 10,000유로로 낮추는 개정(안)이 제시된 바 있었다.³³⁾ 개정위원회는 그러한 (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최저자본금 25,000유로를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1유로를 가지고 회사가 설립되는 ‘미니 유한회사(Mini-GmbH)’인 ‘1-Euro-GmbH’를 도입하였다.³⁴⁾

2) 1인 회사의 설립 완화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아 채권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 하에, 사원에 의하여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이나 현물이 일치하지 않는 자본금의 경우, 유한회사는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절차가 요구되고 있었다.³⁵⁾ 금번 개정에서 동 규정을 삭제하여, 1인 회사의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었다.

3) 영업지분의 양도

개정 전 유한회사법을 살펴보면, 회사 설립 시 영업지분의 매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개정 유한회사법은 그러한 금지사항을 폐지하였다(개정 유한회사법 제5조 제2항을 참조). 회사설립 시 영업지분의 매입금지는 다소

33) 최병규, “독일의 유한회사법 개정안(MoMiG법안)과 시사점”,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 2006, 546면 이하.

34) Hirt, Die "Große GmbH-Regorm", NZG 2008, 761 (762).

35) 개정 전 유한회사법 제7조 제2항과 제3항, 주식회사법 제36조 제2항 제2문을 참조.

관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설립의 장해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영업 지분양도가 보다 더 탄력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주어진다.³⁶⁾ 영업지분의 많은 부분이 동일한 획득자에게 양도금지 하는 것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유한회사법 제17조).

4) 등기의 촉진

상업등기부의 등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 유한회사법은 행정적 허가의 등기절차에 대한 간소화 작업을 하였다. 영업법률적인 허가를 필요로 하는 수공업자의 영업, 레스토랑영업 혹은 건축시공회사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지금까지 그러한 회사는 이미 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국가의 허가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개정 전 유한회사법 제8조 1항 6호), 상업등기부에 등기될 수 있었다. 유한회사법의 개정으로 허가에 갈음하여 관할 장소에 신청하는 것으로 안전성이 충분하게 되었다. 영업허가 없이 계속해서 상업등기부에 표시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등기 후 정해진 시간 안에 허가의 고지가 등기재판소에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회사는 관청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3) 효과

최저자본금의 삭감과 함께 경제생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건을 제조하는 기업형태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반면, 노무이행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설립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하여 자본금에 대한 완화정책을 제공한 것이다. 규모가 작은 기업과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개정된 유한회사법을 통하여, 개정 전에 비하여 회사 설립이 보다 더 용이하게 되었다. 특히 1인 유한회사의 증가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기의 경우 행정적인 법적 허가절차를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 기업설립의 간이화와 촉진을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36) Hueck/Windbichler, Gesellschaftsrecht, C.H.Beck, 23. Aufl., 2013, S. 237 f.

다도 영국의 유한회사와 비교하여 강력한 경쟁력 제고에 있다. 영국을 위시한 유럽연합의 다수 국가들은 중소기업의 설립에 있어서 요구사항이 많지 않고, 최저자본금 납입이 다소 형식적이었다.³⁷⁾ 이 점을 고려하여 독일 한회사법은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져 버린 것이다.

개정 전 유한회사법에 따르면, 1인 유한회사는 그 1인의 사원이 금전출자가 아직 납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안전성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상업등기부에 등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1인 유한회사의 경우 특별한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개정 유한회사법은 1인 유한회사의 설립에 장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1인 유한회사 설립에 불필요한 복잡성을 제거하게 된 것이다(유한회사법 제7조 2항 3문, 19조 4항).

IV.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대기업위주에서 중소기업으로 역할 확대

1960년대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대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을 표방하였다. 삼성이나 현대, LG 등의 대기업은 대외적인 수출을 지향하면서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재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떠한 품목과 어떠한 형태의 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큰 기여를 하였고, 현재 섬유나 의류 및 일반 산업기계 등을 포함하여 전기전자,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이나 화학제품, 1차 금속과 기계 부문인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지향적인 면을 띠고 있다.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및 석유화학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

37) 유럽연합에서 중소기업 법제의 동화에 대하여는 유주선, “유럽연합 중소기업법 동화를 위한 유럽 유한회사법(안)과 한국의 중소기업법제 대한 시사점-회사의 자본, 기관 및 사원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1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29쪽 이하.

서 다른 나라에 자국의 제품을 판매하는 수출지향적인 면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전략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영역에서 중소기업이 역할을 담당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직업교육의 효율화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이론 중심의 교육과 실무 중심의 기업 내 교육이 이원화 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그러한 교육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요학교(Hauptschule)’와 ‘실업학교(Realschule)’의 졸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우리의 교육체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실업고등학교라든가 상업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다양한 직업을 위한 학교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처우개선에 대한 양국의 차이에 있다. 우리의 경우 대학이나 학벌위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동시에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기업구조 역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등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첨단산업도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업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함양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장미 빛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청년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과 실제로 공급되는 인력의 괴리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우가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은 우리의 국가 경제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제도를 면밀하게 관찰 및 벤치마킹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는 동시에, 직업훈련을 마치고 직업인으로 활동

시 대우나 사회적 인식 등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R& D 효율성 강화

연구 및 개발(R&D)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정책을 보면,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적 방안으로서 중소기업과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R&D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체의 기술개발 방법은 작은 기업에 해당할수록 자체 개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산·학·연이 상호 협력하여 R&D 협력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 프라운호퍼 등 유명 연구소의 유능한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명망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특화시킬 수 있는 유명 연구소를 양성하고, 이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기술 개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족회사의 지속적 발전

독일의 중소기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중소기업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 경제발전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기업과 달리, 가족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선호하기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고객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고, 인적자원의 영속성을 확보하며 수평적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가족기업은 그 구성원이 대부분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마련이다. 독일 가족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점은 그 가족기업들이 단기실적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내실 있는 경영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중소기업들이 안정경영에 보다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실제로 기업의 경영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인 측면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의 부도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수기업의 수가 많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독일의 가족기업이 오래기간 장수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의 세제혜택에 있다고 하겠다. 독일은 사업승계 시 사업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8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승계기업의 과세부분에 대한 부담을 절감해 주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우리 역시 가족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가업승계상의 세제혜택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세법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자금 지원 측면

독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이 하우스뱅크(Hausbank)라고 하는 주거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주거은행을 통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된다. 내 신체와 건강을 지속적으로 돌봐 주는 의사를 우리는 주치의라고 한다. 주치의는 내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전과 달리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한다. 발생하는 질환에 대하여 역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한다. 독일 주거은행은 주치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이나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어떠한지, 종업원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 다양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주거은행은 해당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밀착형태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에 대하여 유연한 자세를 견지한다. 독일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성공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확신할 수 없다. 금융기관과 대출수요자의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자금 지원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V. 결 론

유럽의 다수 국가가 국가채무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경제의 발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필자는 유럽의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독일의 경제성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독일 경제성장에 중소기업의 강한 경쟁력을 꼽을 수 있다. 독일 중소기업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가족기업의 형태로 장수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다. 이원적 직업교육제도를 통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시스템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이다. 독일의 시스템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독일에서 그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밑바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되, 수용 가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환국·이연주,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3-020, Kotra, 2013.
- 고규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5.
- 공영일, “독일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I)”, 「방송통신정책」 제25권 제22호, 통권 567호, 2013.
- 김광희, “독일 중소기업금융지원 및 on-lending 방식의 우리나라 중소기업금융지원에의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2008.
- 김계환·온기운·장태석, “독일 제조업 경쟁력 요인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13.
- 박진호,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는 주요 배경”,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제2013-10호, 2013. 4. 29.
- 송준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2009.
- 유주선, “주식회사 순환출자에 관한 최근 입법논의”, 「경제법연구」 제13권 제1호, 2014.
- _____, “유럽연합 중소기업법 동화를 위한 유럽 유한회사법(안)과 한국의 중소기업법제 대한 시사점-회사의 자본, 기관 및 사원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1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_____, “독일의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정책과 법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주최한 ‘중소기업혁신촉진법 개정방안 연구‘ 제3차 워크숍 자료집, 2014년 7월 31일.
- _____, “2008년 독일 유한회사법의 개정과 시사점”,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3권, 2009.
- 이범찬·최준선, 「상법(상)」 제5판, 삼영사, 2008.
- 장선영,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9.
- 전삼현, “유한회사, 상속승계 가능해야”, 2012 정책제안, 자유경제원, 1012년 1월 16일.
- 차두원·손병호,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동향 조사·분석”, 2006. 12.

법제연구 / 제47호

최병규, “독일의 유한회사법 개정안(MoMiG법안)과 시사점”,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 2006.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4년 3월 27일자.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주평, 2011-09, 통권 제436호.

Hirt Heribert, Die "Große GmbH-Regorm", NZG 2008, 761 ff.

Hueck Götz/Windbichler Christine, Gesellschaftsrecht, C.H.Beck, 23. Aufl., 2013.

Kinder Peter, Grundzüge des neuen Kapitalgesellschaftsrecht, NJW 2008, S. 3249 ff.

<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다. 현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진 독일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다수 국가가 국가채무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경제의 발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유럽의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이 있다. 독일 경제성장 원인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의 강한 경쟁력을 단연 제시할 수 있다. 독일 중소기업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가족기업의 형태로 장수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원적 직업교육제도를 통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시스템 또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독일의 시스템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그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밑바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되, 수용 가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중소기업, 제조업 지향, 이원적 직업교육제도, 가족기업, 장수기업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SMEs in German -

Yoo, Ju-Seon*

This paper has been looking for ways to enable the economy through the development of SMEs. The difficulties of the economy has been accelerating. The idea that one must develop a plan for SMEs to overcome the current economic difficulties have been raised. While Germany expanded the discussion around the country, known as exemplary of SMEs, trying to discover the implications. Many European countries are in a situation that does not exit from the sovereign debt status, the development of the German economy is quite encouraging. Europe, despite the economic downturn continues, toxic Germany as a country is a bar that has saved the sustained economic growth without regard to it, there is a need for this quest. Germany is among the most important causes of economic growth points, the strong competitiveness of SMEs can definitely present. German SMEs is that it maintains a long life in the form of a company based on family businesses manufacturing, through a two-tier system of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provide the manpower needed by the company constantly is also worth noting details. To accommodate all of the systems in Germany will have some difficulty. But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the foundation that such a system could be settled in Germany, acceptability and measures will have to be prepared to evolve.

Key Words : small company, oriented manufacturing, dual vocational training, family company, company maintained a long period of time

* Professor Dr. Department of Law in the Kangnam University